글로벌 금융시장론 / 2018. 1학기 학기말 보고서

|  |
| --- |
|  |

**브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
| --- |
|  |

2018년 6월 30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최인규(2016720045)

**목 차**

Ⅰ. 서론

Ⅱ. 브렉시트 관련 주요내용

1.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 및 개요

2. 브렉시트 관련 경과

3. 영국/EU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4.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5. 향후 시나리오 및 전망

Ⅲ.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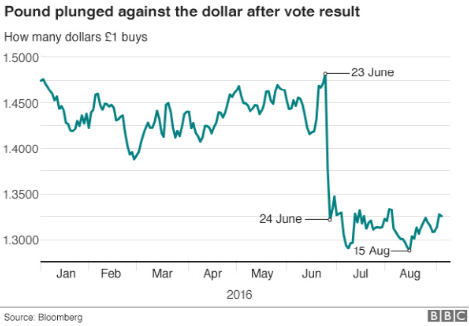
참고문헌

**Ⅰ. 서론**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브렉시트[[1]](#footnote-1)는 마치 ‘블랙 스완(Black Swan)’으로 간주되었다.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인 블랙 스완은 미국 뉴욕대 폴리테크닉연구소 교수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가 그의 저서 The Black Swan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대 영역 바깥쪽의 관측 값으로, 극단적으로 예외적이고 알려지지 않아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고, 발생 후에야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여 설명과 예견이 가능해지는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2]](#footnote-2) 즉, 브렉시트가 실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정답은 정해져 있는 논란 정도로 이해하였으며 마치 승부의 결과가 명백해 보이는 경기를 관람하는 느낌으로 전세계인들은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2016.6.23일 영국 국민들의 투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블랙 스완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영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으며 브렉시트를 걱정했던 사람들의 당초 우려는 조금씩 현실로 나타났다. 세계적 헤지펀드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2016.6.20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브렉시트 결정이 난다면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3]](#footnote-3)했는데 실제로 개표 결과가 집계되면서 파운드화는 급전직하해 장중 10% 이상 폭락하였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표1>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 추이



다행히 브렉시트의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다. 주요 국가별 중앙은행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기도 했으나, 영국 국민의 선택에 대한 영국 정부와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대응은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이전에 여러 차례 위협적인 금융위기를 겪은바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체력이 튼튼해 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렉시트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분석하는 다양한 고민과 연구들이 그날 이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통합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브렉시트가 실행된 이후 가져올 파장은 그 어떤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내 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물론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정치, 외교, 군사, 무역, 경제, 금융 등 사회 전반에 설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우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브렉시트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영국과 EU간 협상의 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영국이 실리를 찾는 협상으로 인정 될 경우 제2·제3의 브렉시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EU의 신중한 입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결정된 브렉시트를 그대로 시행하기도,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 버린 영국의 고민이 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탈리아가 이탈렉시트[[4]](#footnote-4)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EU 권역내에서의 이해관계는 주위의 관측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까닭에 영국과 EU의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영국과의 직접 관계가 많지 않은 관계로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많아짐에 따라 영국과의 직접 관계에서 받는 영향보다 주변국으로부터 받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과 주요 이슈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Ⅱ. 브렉시트 관련 주요내용**

**1. 브렉시트 결정 배경 및 개요[[5]](#footnote-5)**

2013년 블룸버그 연설에서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6]](#footnote-6) 前 영국총리는 “영국 보수당이 2015년 총선에서 재집권하면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영국의 EU 탈퇴를 우선 정치 강령으로 세운 ‘독립당의 놀라운 성장’과 ‘가중되는 난민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2015년 초반만 해도 여론조사 상으로 브렉시트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나, 유럽 난민 사태와 유로존 사태로 인해서 브렉시트의 찬성과 반대 의견 비율이 비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5.11월 캐머런 前 총리는 영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영국의 EU 잔류를 위한 EU 개혁을 촉구하고 협상을 제안하였다. 2016.2.18일 영국과 EU는 브뤼셀에서 협상을 통해 캐머런 총리의 제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하였고, ①보다 긴밀한 연합 반대, ②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③EU 제정 법률의 전면 거부 혹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레드카드 도입, ④이주민의 복지혜택 제한 및 유사시 이민 유입 차단 권한 부여 등 네 가지의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에 캐머런 前 총리는 브뤼셀 협상 타결 직후 브렉시트 국민투표 날짜를 2016.6.23일로 정하여 공포하게 된 것이다. 브렉시트 여론이 형성된 근본적 원인이 되는 영국인들의 주요 불만은 이주민 유입과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회의론, 난민의 강제 배분과 수용에 따른 테러위험에 대한 우려, EU 분담금의 부담 증가, EU의 규제 증가에 따른 불만, 독일의 패권주의에 대한 불만, 영국과 유럽 대륙과의 통합에 대한 전통적 회의론 대두로 정리할 수 있다.[[7]](#footnote-7)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EU탈퇴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꼽아보자면, 첫째는 이민자를 줄이자는 것, 둘째는 영국이 EU의 불합리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고 이는 소외계층과 저학력층 중심의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큰 동인이 되었다.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유럽에 대한 공포 또는 반유럽 정서가 있다. 14~15세기 프랑스와의 백년전쟁, 17~18세기 스페인과 네덜란드와의 해양 패권 다툼, 다시 1815년 프랑스와의 워털루 전쟁, 20세기의 1·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통합에 대한 거부감 또는 경계심이 심어졌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은 EU 회원국이면서도 EU 주변국의 모습을 가져왔다.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거부, EU내 무비자 여행 관리체계인 솅겐조약[[8]](#footnote-8)에의 미가입 등이 그런 것이다. 이러한 유럽 대륙에 대한 영국인들의 공포 또는 반유럽 정서는 영국이 유럽대륙과 동질감을 갖기 어려운 근본적 배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브렉시트의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가 이민 문제이다. 현재 영국에는 외국인이 약 830만명 살고 있다. 이들 중 EU 출신이 300만명 이고 다시 그 중에서 90만명이 폴란드 출신이다. 가난한 동구 EU 회원국 국민들은 영국이 외국인을 느슨하게 통제하는 대신 관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국을 선호한다. EU 단일시장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은 EU출신 외국인의 유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EU 출신 이주자 중 약 30%가 학생 등 비경제활동자로서 복지 혜택만 받고 세금을 내지 않으니 영국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2015년 들어 폭증한 시리아 난민을 EU가 국가별로 강제 할당을 한다고 하니 영국민들은 경악하게 된 것이었다.

<표2> 브렉시트 찬성측 주장 vs 반대측 주장 비교

|  |  |  |  |
| --- | --- | --- | --- |
| 구분 | | 브렉시트 찬성측 주장 | 브렉시트 반대측 주장 |
| 무역 | 상품 | ○맞춤형 특혜무역협정, 양자무역협정  체결로 EU 대안 마련 가능 | ○새로운 관세장벽으로 교역 타격  ○EU 및 제3국과의 새로운 특혜  무역협정 수립에 5~10년 소요 |
| 서비스 | ○지금도 EU 서비스시장 미통합 | ○EU 내 서비스 이동 제약, 서비스  수출 타격  ○서비스 시장 통합과정에서 영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음 |
| 투자 | | ○맞춤형 투자유치 정책으로 전 세계  로부터 투자유치 대폭적 증가 예상 | ○투자증가세 둔화,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높음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특히, 역외  투자의 급격한 감소 가능 |
| 금융시장 | | ○영국의 우수한 인력 및 인프라는  쉽게 대체할 수 없기에 큰 영향  없을 것임 | ○영국의 EU 내 금융서비스 위축  가능성  ○금융중심지로서 지위 상실 가능성 |
| EU예산 기여 | | ○EU 예산 분담금 절약 | ○탈퇴해도 상당규모의 분담금 지급  해야 |
| 이민 | | ○과도한 역내 미숙련 이민을 막을  수 있음 | ○숙련 노동자의 유입 제한  ○이민자 유입감소로 잠재성장률,  소비지출 하락 |
| 환율 | | ○큰 영향 없을 것임 | ○파운드화 약세 및 변동성 증대 |
| 규제 | | ○각종 EU 규제 완화 | ○현재와 차이 없거나 현 수준보다  규제부담 증가 |
| 경제성장 | | ○영국의 투자, 기술, 경쟁력, 혁신,  기업가 정신의 확산으로 영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것임 | ○성장 둔화  ○영국내 상품,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

\*출처 : 윤덕룡(2016.10), Brexit가 글로벌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F

그렇게 진행된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51.9%로 EU잔류(48.1%)보다 우세하여 영국은 사실상 EU탈퇴를 결정하였다.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 외에도 동유럽 이민자 및 난민 유입, 영국의 주권 침해, EU 분담금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EU 출범 이후 회원국의 첫 번째 탈퇴로 인해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쇠퇴하고, 영국과 EU는 모두 격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된 시점이다. 이후 투표 결과에 대한 지역간, 세대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영국 내부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브렉시트 논란이 EU내 다른 국가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영국의 신속한 탈퇴 협상을 요청하였다.

**2. 브렉시트 협상 경과**

영국은 2017.3.29일에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양측은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유럽연합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협상에 돌입하였다.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규정한 TEU 제50조에 따라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탈퇴 의사 통보 후 2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에 소멸할 예정[[9]](#footnote-9)이며,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양측의 비준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가을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에 영국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와 탈퇴 후 영국·EU 관계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야 탈퇴 후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EU의 방침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전반부와 탈퇴 후 관계 및 이행기[[10]](#footnote-10)를 다루는 후반부로 나뉘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측 협상단은 2017.12.8일 발간한 공동보고서를 통해 전반부 협상의 합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2017.12.15일 개최된 EU 정상회의는 이를 토대로 전반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후반부 협상 개시가 가능해졌음을 선언하였다. 전반부 협상의 주요 의제는 세가지로 1)영국 거주 EU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권리 및 EU 잔류국 거주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거주국 내 권리, 2)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3)영국의 EU 가입기간 중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 정산이었는데 주요 합의내용을 간추리면 <표3>과 같다.

<표3> 영국-EU간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의 주요 합의내용

|  |  |
| --- | --- |
| 구분 | 합의내용 |
| 영국 거주 EU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권리 및 EU 잔류국 거주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거주국 내 권리 | 영국의 EU 탈퇴일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지침을 적용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 지침에 상응하는 권리 부여 |
|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 현재와 같이 북아일랜드·아일랜드간 국경 통제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 |
| 영국의 EU 가입기간 중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 정산 | 영국은  ①2019~2020년 EU 예산상의 의무를 기존과 같이 가지고, 2020년 말 기준 EU 예산상의 잔여 의무를 부담  ②탈퇴일 기준 영국의 EIB[[11]](#footnote-11) 최고자본금만큼의 보증을 제공하고 EIB, ECB[[12]](#footnote-12) 등에 대한 납입자본금을 회수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1),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이중 EU 분담금 정산과 관련하여 영국이 정산해야 할 부채는 약130조원으로 합의되었는데, 이는 EU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영국의 사전 약정금액 100조원, EU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장기부채액 14.5조원, 우발채무액 15.5조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단, 영국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EU분담금 총액은 55조원 규모이며 이는 영국의 對EU자산 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제외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이 정산 부채는 2026년까지 정산하되 2/3는 2020년 이전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4> 브렉시트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

|  |  |  |
| --- | --- | --- |
| 날짜 | 내용 | 비고 |
| 2013.1.23 | 캐머런 총리, 2017년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행 선언 |  |
| 2016.5.10 | 캐머런 총리의 보수당 총선 승리 |  |
| 2016.6.24 | ‘브렉시트’ 영국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 통과 | 탈퇴52% vs 잔류 48% |
| 2017.6.19 |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 개시 |  |
| 2017.10.9 | 영국거주 EU회원국 국민 및 EU거주 영국국민 권리 문제 등 3가지 이슈 우선협상에 대한 합의 실패 |  |
| 2017.10.20 | EU정상회담 : 자유무역협정 비롯 미래관계 협상 무산 |  |
| 201712.8 | 1단계 협상 잠정 타결 : 영국 정산 EU분담금 문제 등 | 영국 부담액 : 55조원 |
| ~2018.10월 | 2단계 협상 종료(예정) |  |
| 2019.3.29 | 자동탈퇴 |  |

\* 자료 : 각종 언론 보도자료 정리

**3. 영국/EU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3.1 영국/EU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6.6.23일 브렉시트 선거가 끝난 지 100일 기념으로 유고브(YouGov, 영국 여론조사 기관)가 실시했던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응답자의 77%가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73%가 브렉시트로 직장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77%가 브렉시트로 영국의 국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13]](#footnote-13). 이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만들어냈음에도 영국 국민들 대다수는 브렉시트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의 영국과 EU간 협상 경과를 지켜보면 이와 같은 영국 국민들의 우려는 우려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영국 및 EU 대상 실물투자는 물론 금융투자 및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더불어, 최악의 경우 영국과 EU간 별다른 협정을 맺지 못하고 브렉시트를 맞게 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 상황이 벌어지면 영국과 EU 쌍방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매년 8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14]](#footnote-14)도 나온바 있는데, 영국 수출업계는 매년 39조원의 손실, EU 수출업계는 46조원의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단일시장 탈퇴로 재화와 서비스, 자금,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막히고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서 경제 활동 차질과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5]](#footnote-15)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전제로 영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융산업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불확실성의 증대이며, 이는 국제 금융에서의 위치가 큰 영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변동성이 큰 리스크 요소이다. 둘째, 영국은 EU의 금융규제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바뀌게 되므로 규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도 매우 클 것이다. 셋째, 영국이 금융중심지로서 갖고 있는 패스포트[[16]](#footnote-16) 권한의 상실은 런던의 금융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융관련 고용의 해외이전을 야기하여 영국 고용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넷째, 영국 금융생태계의 변화는 금융·자본수지의 흑자로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영국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국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조정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17]](#footnote-17)

영국의 주요 고용주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영국 경제가 2018년에는 속도를 늦출 것이며 브렉시트로 인해 더욱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CBI는 영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1.8%에서 올해는 1.4%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이처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올해 초 겨울 폭설과 브렉시트 우려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에서 탈퇴하는 2019년 GDP성장률은 1.3%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도 제시했다.[[18]](#footnote-18)

더불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영국에 소재한 기업들이 영국에서 철수해 나가도록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영국 진출 기업들의 투자 중단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럽의 최고 항공기 제작사이자 영국에서 14,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만 11만명에 달하는 에어버스는 영국이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대한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영국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19]](#footnote-19) 자동차 회사인 BMW도 브렉시트 협상 부진을 이유로 투자 축소를 경고한바 있으며, 이미 지난 2018.3월에 유니레버는 영국 런던의 본사를 네덜란드 로테르담 본사와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18.6.23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EU 6개국 기업체 임원 800여명 중 46%는 “자사가 지난 2년 간 영국에 투자를 줄였다.”고 답하였다.[[20]](#footnote-20) 이러한 동향은 영국이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무질서한 브렉시트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영국 내에서는 투자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런던은 오랜 기간 동안 뉴욕과 함께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런던이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찍부터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영국 자체의 특징과 1980년대 중반의 금융개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유럽단일시장의 발전은 런던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집중되는 결정적인 동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렉시트는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런던의 위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17.12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EU 경제의 특징별 파급 전망에서도 브렉시트 협상은 EU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불확실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5> EU 경제 특징별 파급 전망

|  |  |  |  |  |
| --- | --- | --- | --- | --- |
| **긍정 요인** |  | **부정 요인** |  | **불확실 요인** |
|  |  |  |  |  |
| 재정건전성 개선 |  | 남유럽 은행  부실 자산 |  | ECB 통화정책  유로화 향방 |
|  |  |  |  |  |
| 가계 소득/소비 확대 |  | 테러/난민 등  지정학적 리스크 |  | **브렉시트 협상** |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7.12), 최근 EU 경제의 특징과 전망

<표5>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EU 경제분야 중 신용위험 확대에 따른 파장은 대표적 부정적 영향의 하나이다. 더불어 신용위험의 확대와 함께 경기둔화, 장기금리 하락 등으로 은행의 자본부실 문제가 악화되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중심 유로주변국 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브렉시트의 향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영국은 ‘미지의 바다(unchartered waters)’로 뛰어들었다는 외신의 표현과 같이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전례 없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는 EU 또한 마찬가지이다. 유로존 위기[[21]](#footnote-21)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표출되는 EU와 유로존 체제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체제로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EU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향후 유럽 내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정치, 경제적 변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2]](#footnote-22)

**3.2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6.6.23일 투표결과 발표 직후 예상과 다른 투표 결과로 국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글로벌 시가총액 61조 3,000억 달러가 증발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으나 대부분 빠르게 안정화 된 바 있다. 오히려, 영국 및 EU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기초경제여건도 양호한 아시아 신흥국 주가는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및 위험회피 심리로 일시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주EU 미국상공회의소, 주EU 인도상공회의소, 주EU 일본 기업협의체, 캐나다 유럽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주요국가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브렉시트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계속될 경우 1천억 파운드(한화 약 148조원)에 달하는 영국과의 통상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23]](#footnote-23) 이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영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브렉시트가 교역 축소 및 영국의 경기 둔화 등 실물부문에 대한 파급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브렉시트를 세계적 충격(Global shock)보다는 지역적 충격(Local shock)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현실이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및 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된다면 이는 주로 국제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불안정성 증폭 및 안전자산 쏠림 현상 등 금융경로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4.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브렉시트가 유로존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직후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환율 급등, CDS 프리미엄 상승 등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과 함께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경우 주로 주식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주었으나 단기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의 경우도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당일 급등했으나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하락한 바 있다.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영국의 보유비중도 낮은 편으로 브렉시트의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자의 보유비중은 32.5%인데(2016.5월말 기준), 영국의 보유비중은 외국인 전체의 8.4%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비중은 6.2%인데(2016.5월말 기준), 영국의 보유비중은 외국인 전체의 약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외건전성 개선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충격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외채 비중의 하락, 외채구조의 장기화, 외환보유액의 지속적인 증가 등 대외건전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이 영국을 거점으로 진출하여 EU 권역내 다른 국가와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이제는 그 거점을 영국 외에 다른 EU 권역내 거점을 추가 확보하는 이슈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EU 권역내에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런던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증권사 3곳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5곳이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며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5곳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포함 7곳의 현지법인과 지점을 운영 중에 있다.

브렉시트의 충격이 국제금융시장 혹은 제3국을 통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전달경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불러일으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채권가격 및 통화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일부 신흥국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브렉시트는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지라도 향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긴장상태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금융시장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이 수익률 제고와 투자 다변화 목적으로 유럽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어 브렉시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채권,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종통화 대 미국 달러화로의 전환 여부, 환헤징 수단의 선택 등을 포함한 포괄적 환헤징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추가 투자 검토시에는 변동성이 커진 유럽시장 보다는 미국 및 아시아 지역 중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목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24]](#footnote-24) 또한,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안전자산 선호 성향을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국채금리를 떨어뜨릴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사 이차역마진 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해외자산 운용전략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자산 측면에서 금리위험을 헤징하는 ‘매크로 헤징’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25]](#footnote-25)

**5. 향후 시나리오 및 전망**

브렉시트는 2019.3월부터 시작된다. 당초 영국 집권 보수당은 브렉시트가 실행되면 EU와 관세동맹, 단일 시장에서 모두 탈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무역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영국과 EU간 협상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1년의 시한을 정해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는 등 현 체제를 상당부분 유지하는 과도기 방안에 최근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브렉시트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국경이 생기는 사태 등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쟁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내려진 소극적 판단유예 결정으로 보인다. 즉, 협상의 지연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불확실성이 야기할 문제점은 해소된 것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불확실성의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영국의 노동계와 기업계는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통해 “조속한 브렉시트 협상을 촉구”하였다.[[26]](#footnote-26) 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2년간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한 노동계와 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니 블레어 前 영국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며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27]](#footnote-27) 이는 브렉시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닥칠 가장 큰 지정학적 변화라는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영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혼란 속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지 소로스는 영국이 여전히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28]](#footnote-28)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는 노딜 브렉시트를 맞이할 경우 3가지 시나리오를 추정[[29]](#footnote-29)했다고 전했는데, 3가지 시나리오는「보통」,「심한」,「아마겟돈의 대파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중간 충격에 해당하는「심한」단계의 시나리오의 경우 ‘영불해협의 페리 운행이 첫날부터 정지돼 곧 슈퍼마켓과 병원 의약품이 2주 안에 동이 나고 휘발유도 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당국은 항공기를 전세 내거나 영국 공군이 물자를 실어 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데이 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EU에서는 ‘그러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30]](#footnote-30)

<표6> 브렉시트 협상 주요 쟁점

|  |  |  |
| --- | --- | --- |
| 구분 | 영국 | EU |
| 기본  협상방향 | EU 완전 탈퇴 | EU내 노동의 자유로운 보장 |
| 탈퇴협상과 통상관계 협상 동시 진행 | 先탈퇴협상 後통상협상 진행 |
| 탈퇴  협정 | 회원국 기간 동안 분담금만 납부 | 양정 분담금 모두 납부 |
| EU내 자국민 지위 보장 | 상호주의 관점 |
| 영국-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인적 이동 | EU 법질서를 위배하지 않아야 함 |
| 통상관계  협정 | FTA 형태의 새로운 통상 관계 | 입장 동일 |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7.12), 최근 EU 경제의 특징과 전망

최근 영국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금융중심지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금융강국과 ‘금융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31]](#footnote-31) 영국 재무장관인 필립 해먼드는 “세계에 개방되어 있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남는 것이 영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토대가 될 것” 이라며, “영국은 중요한 신흥시장을 포함해 계속해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우려되어온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이해되며, 즉각적으로 영국내 금융산업의 환영을 받았다.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영국은 물론 EU 자체적으로도 브렉시트 협상 전략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영국과 EU가 노딜 브렉시트라는 파국을 막을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향후 브렉시트 협상은 이행기 협상과 탈퇴후 협상으로 나뉘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이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이행기 협상」에서는 EU의 통상정책, EU 차원의 행정 및 사법 체계 등은 기존과 같이 영국에 적용될 전망이나 EU 기관 및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렉시트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탈퇴일 이전에 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측은 급격한 관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행기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이행기 기간은 2020년 말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32]](#footnote-32)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영국과 EU간「탈퇴후 협상」은 상호간 관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따라 양측이 기본적으로는 긴밀한 경제관계 유지를 원하지만, 단일시장 접근의 조건인「4대 이동의 자유[[33]](#footnote-33)」가 불가분 하다는 EU 입장과「인적 이동 자유」를 거부하는 영국 입장 간 대립으로 탈퇴 후 관계는 현재보다 약화될 전망인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EU가 캐나다와 체결한 CETA[[34]](#footnote-34)(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에 서비스분야 개방을 강화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35]](#footnote-35)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영국정부도 현 상태에 가까운 경제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투표 결과에 담긴 민심이 인적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역내 4대 이동의 자유에 반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4대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단일시장 잔류는 포기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과 같이 비회원국으로 단일시장에 잔류하되 인적 이동은 제한하는 것도 거론되고는 있지만 4대 이동의 자유가 불가분 하다는 EU 측 입장에 따라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36]](#footnote-3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브렉시트 협상의 방향과 그 전망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큰 답답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브렉시트가 미치는 이슈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정해진 직후 전 세계가 블랙스완의 현실화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은 파운드화의 폭락과 함께 세계 주요국가 중앙은행의 긴급한 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이끌어 낼 만큼 브렉시트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안겨 주었다. 이처럼 브렉시트 결정의 영향은 즉각적인 파급력을 보일 것처럼 급박한 움직임들이 있었으나, 다행히 시장의 충격과 심리적 충격은 단기적으로 정리되었고 조기 진정된 바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영향이 이로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비로서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표7> 브렉시트 결정 당시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

|  |  |
| --- | --- |
| 대상 | 주요조치(2016년) |
| BOE | 시장안정화 메시지(6.24), 유동성 공급(6.14,21,28)  통화정책 완화 시사(6.30),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하향(7.5) |
| ECB | 시장안정 의지 표명(6.24), 유동성 공급 |
| Fed | 시장안정화 메시지(6.24), 통화스왑자금 지원 준비 |
| BOJ | 외환시장 안정화 의지 표명, 외화유동성 공급(6.28) |

\* 출처 : 언론보도 내용 정리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2년여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탈퇴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가져올 충격의 실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내에서는 브렉시트가 유럽 통합을 좌초시키는 전주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등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즉, 브렉시트는 향후 영국과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경제·금융·안보·정치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미래형 사건이다.

최근 파운드화는 달러화에 연중 최저치[[37]](#footnote-37)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네덜란드 라보은행(RaboBank)의 외환 전략가인 제인 폴리는 파운드화 약세의 주요원인으로 달러화가 주요 선진국 통화와 신흥시장 통화에 강하게 반등한 것과 미·중 무역전쟁 우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상승 등과 함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꼽았으며, 더불어 2019년3월을 훨씬 지난 뒤에도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38]](#footnote-38) 이처럼 브렉시트는 생각보다 장시간 불확실성을 내포한 채 금융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미국 국민들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평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슈와 약간은 다르지만 브렉시트 역시 난민·이민 유입을 거부하고 EU와의 협약을 주권 개입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기울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도 EU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브렉시트 협상의 향후 진행방향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EU 체계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제2·제3의 브렉시트가 등장하게 될지 여부가 영국과 EU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EU의 난민 수용 문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데로 EU 4대 경제국이자 유로존 핵심국가인 이탈리아의 집권 연립여당은 국가부채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면서 이를 막으면 EU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며 위협하고 있어 이탈렉시트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39]](#footnote-39). 만약 영국이 실리를 찾는 브렉시트 협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탈렉시트’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또 다른 EU탈퇴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슬로바키아와 프랑스, 덴마크, 체코, 핀란드 등인데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극우 성향 정당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은 브렉시트 협상기간 동안 영국과 EU는 경제·금융 시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물론 EU의 단일체계 유지의 향방까지 고려하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과의 교역 규모나 영국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참여 수준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변국들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미칠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므로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빚어내는 또 다른 블랙스완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브렉시트가 내포하고 있는 변수가 워낙 다양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웠으며,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과정상 이슈사항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브렉시트 협상의 진전에 따라 변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文獻**

1. 조명진(2016.12),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한국경제신문

2. 임준환/박선영(2017.3), 하드 브렉시트가 금융시장과 해외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3. 임준환(2016.6.26),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4. 윌리엄 키건·데이비드 마시·리처드 로버츠(2018.5), '브렉시트와 신국제금융질서'-영국

EU이탈과 미래의 이해, 뉴스1

5. 조동희(2018.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6. 윤덕룡(2016.10), Brexit가 글로벌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F

7. 현대경제연구원(2017.12), 최근 EU 경제의 특징과 전망

8. 강유덕(2017), 브렉시트와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런던의 지위 : 금융산업별 영향과 전망

9. 연합뉴스(2018.6.26), 「미·일·캐나다·인도 재계 “영국, 무질서한 브렉시트 향해 가」

10. 국민일보(2016.6.24), ‘브렉시트 쇼크…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11. 연합뉴스(2018.6.22), ‘브렉시트 국민투표후 2년…위기가 보약된 EU, 아직 곳곳에 뇌관’

12. 연합인포맥스(2018.6.21),「파운드, BOE ‘금리결정’ 앞두고 달러화에 연중최저」

13. 뉴시스(2018.6.15),「英, 여전한 브렉시트 혼란… 메이 총리, 타협안 말바꾸기 논란」

14. 초이스경제(2018.6.16), 브렉시트 우려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 1.4%로 낮춰

15. 파이낸셜뉴스(2018.6.14), 英 자동차 산업, 브렉시트로 전멸 경고

16. 연합뉴스(2018.6.17), 브렉시트 이후 벨기에 국적 얻은 영국인 10배 증가

17. 국민일보(2018.6.4), 영국 내년 3월 ‘브렉시트’ 시작… 3가지 시나리오

18. 연합뉴스(2018.6.21), 「英, ‘브렉시트 공백 막자’… 중국·한국 등과 금융 파트너십 추진」

19. 뉴시스(2018.6.27), 「英 노동·기업계, 이례적 공동성명…”조속한 브렉시트 협상 촉구”」

20. 연합뉴스(2018.6.28), 브렉시트 연기론… 블레어 前총리 “합의 없는 탈퇴는 치명타”

21. 초이스경제(2018.6.16), 「브렉시트 우려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 1.4%로 낮춰」

22. KBS(2018.6.25), 「‘노 딜 브렉시트’ 우려 속 기업들 영국서 철수 경고 잇따라」

23. 뉴시스(2018.6.25), 「EU기업 46%, “브렉시트 결정 후 英에 투자 줄여”」

24. 한국경제(2016.11.21), 기고문, 「미국·영국 신고립주의, 힘의 균형추 살펴야」

25. 파이낸셜뉴스(2018.3.13), ‘노딜 브렉시트’ 영국-EU 매년 86조원 손실

26. 아시아경제(2016.6.21),「조지소로스, “브렉시트 발생시 24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1.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2012년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온 말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지식백과」 참고 [↑](#footnote-ref-1)
2. 국민일보(2016.6.24), ‘브렉시트 쇼크…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footnote-ref-2)
3. 아시아경제(2016.6.21), 「조지소로스, “브렉시트 발생시 24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footnote-ref-3)
4. Italia\_Exit, 이탈리아의 EU 탈퇴를 말함 [↑](#footnote-ref-4)
5. 조명진(2016.12),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한국경제신문, 12페이지~60페이지 중 인용 [↑](#footnote-ref-5)
6.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 2010.5~2016.7월간 영국 총리 역임, 前 보수당 대표 [↑](#footnote-ref-6)
7. 윤덕룡(2016.10), Brexit가 글로벌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F [↑](#footnote-ref-7)
8.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 [↑](#footnote-ref-8)
9. 단, 영국을 포함한 EU 정상회의 만장일치가 있을 경우 탈퇴 시점 연기 가능(TEU 제50조제3항) [↑](#footnote-ref-9)
10.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이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의미. 언론 기사 등 참고. [↑](#footnote-ref-10)
11. EIB : European Investment Bank [↑](#footnote-ref-11)
12. ECB : European Central Bank [↑](#footnote-ref-12)
13. 한국경제(2016.11.21), 기고문, 「미국·영국 신고립주의, 힘의 균형추 살펴야」 [↑](#footnote-ref-13)
14. 英 올리버 와이먼/클리포드 챈스 발표 보고서(2018.3.11) 인용 [↑](#footnote-ref-14)
15. 파이낸셜뉴스(2018.3.13), ‘노딜 브렉시트’ 영국-EU 매년 86조원 손실 [↑](#footnote-ref-15)
16. EU 권역내 한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다른 EU 국가와 거래를 할 경우 별도의 추가 진입장벽 없이 거래 가능한 권한 [↑](#footnote-ref-16)
17. 강유덕(2017), 브렉시트와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런던의 지위 : 금융산업별 영향과 전망 [↑](#footnote-ref-17)
18. 초이스경제(2018.6.16), 「브렉시트 우려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 1.4%로 낮춰」 [↑](#footnote-ref-18)
19. KBS(2018.6.25), 「‘노 딜 브렉시트’ 우려 속 기업들 영국서 철수 경고 잇따라」 [↑](#footnote-ref-19)
20. 뉴시스(2018.6.25), 「EU기업 46%, “브렉시트 결정 후 英에 투자 줄여”」 [↑](#footnote-ref-20)
21. 유럽 국가의 연쇄적인 국가부도위기를 말함 [↑](#footnote-ref-21)
22. 강유덕(2017), 브렉시트와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런던의 지위 : 금융산업별 영향과 전망 [↑](#footnote-ref-22)
23. 연합뉴스(2018.6.26), 「미·일·캐나다·인도 재계 “영국, 무질서한 브렉시트 향해 가」 [↑](#footnote-ref-23)
24. 임준환/박선영(2017.3), 하드 브렉시트가 금융시장과 해외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footnote-ref-24)
25. 임준환(2016.6.26),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footnote-ref-25)
26. 뉴시스(2018.6.27), 「英 노동·기업계, 이례적 공동성명…”조속한 브렉시트 협상 촉구”」 [↑](#footnote-ref-26)
27. 연합뉴스(2018.6.28), 브렉시트 연기론… 블레어 前총리 “합의 없는 탈퇴는 치명타” [↑](#footnote-ref-27)
28. 연합뉴스(2018.6.28), 브렉시트 연기론… 블레어 前총리 “합의 없는 탈퇴는 치명타” [↑](#footnote-ref-28)
29. 국민일보(2018.6.4), 영국 내년 3월 ‘브렉시트’ 시작… 3가지 시나리오 [↑](#footnote-ref-29)
30. 국민일보(2018.6.4), 영국 내년 3월 ‘브렉시트’ 시작… 3가지 시나리오 [↑](#footnote-ref-30)
31. 연합뉴스(2018.6.21), 「英, ‘브렉시트 공백 막자’… 중국·한국 등과 금융 파트너십 추진」 [↑](#footnote-ref-31)
32. 조동희(2018.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footnote-ref-32)
33. EU의 4대 이동의 자유(사람, 자본, 상품 및 서비스) [↑](#footnote-ref-33)
34. CETA는 EU가 비회원국과 양자 간에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나,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EU 역내에서보다 현저하게 낮고, 특히 영국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의 패스포팅 권한(Passporting Right)이 없음 [↑](#footnote-ref-34)
35. 조동희(2018.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footnote-ref-35)
36. 조동희(2018.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footnote-ref-36)
37. 파운드-달러 환율 : 1.31459달러(2018.6.20일 기준), 2018년초 1.4376달러 대비 8.4% 하락,

    연합인포맥스(2018.6.21),「파운드, BOE ‘금리결정’ 앞두고 달러화에 연중최저」 [↑](#footnote-ref-37)
38. 연합인포맥스(2018.6.21),「파운드, BOE ‘금리결정’ 앞두고 달러화에 연중최저」 [↑](#footnote-ref-38)
39. 연합뉴스, 2018.6.22,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2년…위기가 보약된 EU, 아직 곳곳에 뇌관’ [↑](#footnote-ref-39)